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파면...국민이 이겼다

헌재,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국회 봉쇄 등 5가지 쟁점 위헌 심판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하다” 판결
분열된 대한민국 통합·민생회복 등 과제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사건 (2024헌나8)’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재판관의 주문 낭독과 동시에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이번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차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다.

지난해 12월 3일 45년만에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국정 혼란을 불렀다.

분노한 국민은 ‘12·3 계엄사태’를 이겨내고,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냈다. 국민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장 122일간에 걸친 장기 탄핵집회를 열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 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 사항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도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아 5가지 쟁점을 놓고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12·3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16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처음으로 법정에서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들의 입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정치공세라고 몰아세웠고, 비상계엄은 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경고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 되면서 남은 과제는 분열된 대한민국의 통합과 민생회복이다.

환율 급등과 주식 급변동 등 계엄 파장에 휘말렸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공석에 따른 정치 불안과 진영 갈등 등 여전한 국정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파면 됨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내란·외환 범죄 수사와 재판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 8대 0 만장일치 ‘인용’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침해

국민의 신임 배반 중대한 법 위반”

尹, 무모한 ‘계엄’ 승부수로

임기 3년도 못 채우고 퇴장



대통령선거 6월 3일 전망

민주당 이재명 대표 출마 유력

국힘은 본격 후보 경쟁 체제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국은 조기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충격파를 최소화 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대선 준비에 돌입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권 탈환을 위한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출마가 유력한 만큼, 조기대선에 따라 여야 각당의 지도부 체계와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정치 지형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여야 잠룡들은 사실상 본격 대권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여권에서 언급되는 잠룡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대권 도전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태환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당 소속 시장·도지사들이 대권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함으로써 두 담여에 걸친 잠행을 끝낸다. 안철수 의원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 노선을 표방하면서 외적인 확장에도 신경을 쓰는 등 진보와 보수 갈등에 지친 ‘중도층’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경제 성장과 감세 정책, 친기업 행보 등 ‘정책 우를락’ 행보를 하면서 당의 정체성이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잘사니즘’으로 명명한 실용주의를 앞세운 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자신과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으로 규정하며 외연 확장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또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조직을 띄웠다. 또한, 전국 청년위원회 발대식과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이날 연이어 개최하는 등 20·30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한 공동 행보에도 나설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범야권 통합 경선으로 단일화를 염두에 둔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대권 출마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가능성은 낮지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국민의힘은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조기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 출마에 따른 당권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빠듯한 조기대선 일정상 전당대회를 치르기 힘들고, 비대위 체제 전환시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해야 하는 부담 탓에 당 대표 대행체제 등을 통해 대선을 총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대권주자 경선 과정도 불필요한 절차 등을 생략하는 방식이 예상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 광우일보 (www.kwangju.co.kr)에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기사 자세히 보도합니다.